고시 강행에 '성난 촛불'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농성 돌입
미 쇠고기 반대 거리시위 격화될 듯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29일 발표함에 따라 '수입 반대'를 주장해온 단체와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미 거리투쟁을 공언했고, 민주노총은 미국 쇠고기 출하와 하역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단순히 쇠고기 수입반대를 넘어 반정부 투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촛불집회 거리시위로 격화=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비상시국회의'는 29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고시철회를 촉구하는 거리 농성에 돌입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또 오는 31일 오후 6시 광주역에서부터 금남로까지 거리시위를 벌인 뒤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고시강행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부는 수입고시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정부 고시가 강행된 이상 이제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산 쇠고기, 교육정책, 공무원감축 등 사안별로 대정부 투쟁 의제를 하나로 결집시켜 촛불집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종교 관계자는 "광주지역 사찰과 교회에 고시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천700여개 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도 이날 "정부가 국민에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라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도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고시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노동계·학생운동권 하투(夏鬪)로 번지나=민주노총과 학생운동권은 쇠고기 파동을 하투의 동력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오후 경기·부산 등 전국 14곳의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쇠고기 출하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3일 오전부터는 전면적인 운송저지 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이명박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6월항쟁' 당일인 10일에는 '총력집중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대학생총연합회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와 청계광장에서 '한국대학생대회'를 개최한다. 또 다음달 10일에는 6·10항쟁 21주년 행사, 6월 13일에는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미선양의 6주기 행사가 예정돼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쇠고기 수입 고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촛불 입건자' 전원 기소 방침

"경찰에 폭행당했다" 시민 주장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시위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서울지역 시위에 참가해 불구속입건된 참가자는 일단 전원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불법 집회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도로 점거 시위에 가담했다 불구속입건된 참가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시위가 시작된 25일 새벽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211명이 현장에서 연행돼 91명이 입건됐고 4명은 즉심회부, 10명은 훈방됐으며 104명은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건강 문제 등으로 석방돼 이후에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입건된 집회 참가자 중 사안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시법(해산요구 불응)이나 형법(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배후에서 집회를 조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리시위에 참가했던 시민이 전투경찰에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동대문운동장 인근 인도에서 30대 최모씨가 전경에 포위된 상태에서 안면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해 코피가 나고 이마와 뺨 등이 멍드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

최씨는 "전경 20여명이 나를 건물 외벽으로 끌고 가 포위한 뒤 자기들 무릎으로 내 얼굴을 5~6차례 집중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의문사' 복어 독 검출

의사 김씨 사건 발생 사흘전 중국서 구입

지난달 27일 골프를 치러가다 제2중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광주 S고 선배 김모(50·이비인후과 의사)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박모(48·골프의류 판매업)씨에게서 복어 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검출됐다.

테트로도톡신은 의사 김씨가 중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김씨에게서는 이 성분이 나오지 않아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9일 "국과수로부터 테트로도톡신이 박씨의 구토물과 위에서 검출됐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테트로톡신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주사기와 주사바늘, 캡슐, 홍삼드링크에서도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김씨가 사건 발생 사흘전인 지난달 24일 중국 다롄(大連)의 약품취급회사 직원인 박모(46)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캡슐 형태의 테트로도톡신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어 독의 주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 들어 있으며, 청산가리 독성의 1천배에 달해 단 1㎎만 먹어도 성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맹독이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6홀 골프 경기를 할 계획으로 출발, 오전 7시38분께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제2중부고속도로의 박씨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특별한 외상 없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집서만 두달동안 네차례 털려

쌍나팔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달 동안 네 차례나 물품이 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구 마륵동 김모(37)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해 거실에 있던 청소기와 벽시계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쳐갔다는 것.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 자주 집을 비운 틈을 타 인근 청소년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

○…한편 김씨는 지난해와 2006년에도 열 차례나 도둑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2005년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려 경찰에 신고한 것 외에는 지난해까지 신고된 사건은 없었다고 상반된 주장.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미 쇠고기 안먹기 운동 확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발표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되면서 주부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인 '수입쇠고기 안먹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광주·전남감시단'은 29일 현재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와 안먹기운동에 동참하는 4만여명의 시민·학생들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서명에 응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와 학생들로, 직접 서명부스를 찾아와 서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들의 서명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물론, 수입이 강행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 안정성을 감시하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에 대비해 학교 급식에서 육가공 식품을 자녀들의 식단에서 줄여나가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선 참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미국산과 호주산, 국산 쇠고기를 구별하는 것과, 미국산 쇠고기 일부가 들어가는 식품을 확인하는 것 모두 어려운 일이다"며 "위험성이 높은 육류와 육가공 식품 전체를 식단에서 줄여나가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보건의료산업노조도 최근 병원급식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추방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올해 산별교섭 주요사안으로 이를 명시할 것을 결정했다. 또 환자 및 보호자를 상대로 한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산별노조별로 미국산 쇠고기 단체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본부는 각 노동조합의 복지부장을 실무자로 두고 급식소에 육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사장과 노동조합 간의 서약식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를 조합원 식탁에 올리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급식업체와 식자재 납품업체 재계약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단체협약에도 이를 명시화하기로 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사회적기업' 횡령 혐의 압수수색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인건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된 사회적기업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통장, 회계장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사는 광주종합고용안전센터 등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 등 지자체의 문화예술사업도 맡아 왔다.

경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광주시청과 광주지방노동청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